



## 허식 의장 “역사 왜곡 폼훼가 아닌 바른 인식” 부상

- ▶ 인천시 보조금 횡령한 언론인을 입사시킨 신문은 자정 필요
- ▶ 5·18 진상은 증거가 우선...가짜 유공자 판쳐도 침묵한 언론
- ▶ 역사 폼훼란 허위사실일 때 비판해야...공산화 지킴이가 중론

인천 한 지방지가 과거 보조금 횡령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언론인을 재입사 시켜 지역 언론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5·18 민주화 운동 진상을 보면 가짜 유공자가 판쳐도 인식 부족으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번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역사 폼훼 왜곡이라는 부정적 논조로 공격을 당했다. 진짜 민주화 운동의 수호자들이 가짜 유공자들로 인해 도매금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대한민국 “햇 이슈로 떠오르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란 40면 단독보도는 1000만 부를 발행한다고 밝혀 역사 교과서 일 만큼 충격을 주고 있다. 그 파괴력은 일파만파 확산이 되면서 발로 뛰는 취재의 땀방울을 두고 기자란 현장으로 가야 한다”라는 여론이다.

이런 신문을 한 지방지에서 허식 의장이 신문을 나누어 주었다는 문제를 들어 공격했다. 허 의장 해명을 들어보면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신문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기사 달라고 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비화시키고 있다.

실제 5·18 가짜 유공자들이 판을 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인천

의 정치권 인사도 가짜 유공자 명단에 오른 사실이 책자로 발간되어 확인됐다. 5·18 가짜 민주화 명단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명예 훼손이면 큰일이지만 시민단체가 나선 것을 보면 조사는 명확했다.

지역 언론에서 이런 사실을 외면한 것은 정보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니면 침묵하는 것인지는 모르다. “갯밥에 눈이 어두워 보조금을 횡령해 징역을 살다가 나온 직원을 채용할 정도로 엉망인 언론사로 치부되는 것도 인식 부족”으로 지적됐다.

지방지로서 인식이 부족한 모습은 5·18 민주화 운동을 위해 싸운 열사들과 함께 가짜 유공자 등 내란의 세력들은 다르다는 사실로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명을 내어놓고 독재와 싸운 열사들이 울고 있다. 또 북한 활동은 당시 정보당국에서 일한 실제 증언을 토대로 보도된 것으로 언론 역사상 첫 시도란 점이다.

언론사가 사실을 근거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폼훼하기 위해 40면을 발행하지 않는다. 팩트를 근거하지 않으면 뒷감당은 감옥에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지는 폼훼란 말을 함부로 썼다. 팩트 체크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허식 의장은 시의회 의장이기 전 “엄청난 진실을 두고 관심이 컸다는 사실의 발로가 의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뜻은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반공 의식이 앞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소리만 들어도 선열들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민주화 운동의 실체가 당적이 다른 것과 무슨 상관인지 묻고 있다. 역사 바로잡기가 부상하고 있는데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지나친 정치적 해석은 오히려 진실을 폼훼하는 행위로서 진영의 논리에 깊숙이 들어간 못난이들의 의견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중복세력과 주사파들이 이 나라를 운영했던 기억은 모르는지 안타까움이 들어 측은해 보인다.

지방지가 낸 기사 내용은 “5·18 특별판이라며 총 40개면으로 편집돼 발간된 해당 신문에 담긴 기사들은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들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방지는 5·18운동이 군부 쿠데타 세력과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에 해당한다는 역사적 평가와 일반 대중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 가짜 유공자와 중복세력이



40면 발행된 1면 헤드라인 5·18 민주화운동 기사

판을 친 증거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지방지 기사에 내용은 평가절하됐다.

40면 보도를 하면서 증거가 없이 보도할 수 있는지 상식에도 없는 논조로 오히려 역사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귀한 민주화 운동을 바로잡자는 것이 40면 발행의 팩트로서 차라리 알지 못하면 침묵하는 것이 옳다.

지방지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A 시의원은 “극우 유투버나 할 일을 의장이란 사람이 하고 있다”며 “역사 인식이, 역사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뒤에 숨지 말고 언론사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면 전면에서 나와야 한다.

누가 역사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것인지 ‘적반장’이다. 한 시민 의견은 공산주의자나 생각하는 의원으로 보인다고 꼽지 않다. 정치적 공방보다 우선인

것은 진실 찾기 과제라고 했다. 역사를 바로 알자는데 신문을 준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하찮은 시야가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다.

한편, 허식 의장은 신문을 주었던 것은 관심이 커 누구는 주고 누군 안 주면 되나 싶어서 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한 분들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했다. 고귀한 희생은 자유를 위해 싸운 것이고 그 자유를 윤석열 정부에서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역사 왜곡 폼훼란 말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는 것, 확인되지 않은 말로서 40면을 발행한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서 우리는 언론의 보도를 믿는 것이 잘못이냐고 한다. 특히 선열들은 이 나라를 세우는데 6, 25 등 피를 뿌리며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쟁취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양홍 위원  
/최재윤 기자

### 사설

## 인천 舊 송도 ‘성냥갑 아파트’ 건설만 능사인가?

### 생산 시설 인프라 구축이 먼저... 주거 환경 개선 필요 녹지 자연주택 등 원안 실종된 현실, 지방정부 용도변경

인천 구(舊)송도 등 기업들이 수익사업만 탐내며 보유하고 있는 기존 토지의 개발은 세월만 보내면서 용도변경의 꿈수는 행정기관과 손발을 맞추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결과론은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평가와 주변의 생산시설 등 공원과 및 시설 인프라의 관련된 정책이 촘촘하게 요구되고 있다. 실제 용도변경 등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만 보더라도 과밀 오피스텔과 고층 아파트로 도시는 성냥갑처럼 빈틈이 없다. 송도유원지 등 오래된 토지도 이제 70층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꿈틀거리다.

부영그룹도 70층 아파트 대단지가 기획됐다. 실제 부영그룹은 싼값

에 토지를 매입 후 오랜 세월 부가가치는 최고조로 올랐다. 토양 오염 등 문제는 인천의 골치거리였다.

송도테마파크 건설 조건부로 70층 아파트를 허가했다. 토양과 인근 슬럼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송도유원지 등 한술 더 뜨고 있다.

송도유원지의 토지도 70층 아파트를 건축하게 해달라는 소리가 나왔다. 수익사업으로 도시를 성냥갑으로 만들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인천시민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과거 송도유원지는 인천시민들

의 휴식처였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말았다. 유원지를 풀어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아예 아파트만 건설해 기업의 수익만 생각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인구는 줄고 공동주택은 늘어나고 자연 친화적 인프라는 수용대비 현저하게 모자란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로서 녹지환경은 인천에서 0%에 해당하고 있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송도유원지 인근 등 아파트를 건축할 것이 아니라 생산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인식하고 물류단지 등 자연과 어울림을 가지는 전원주택 등 용도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주변 환경을 자연 친화적으로 바꿔야 할 속제는 수익적 타산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할 심각성 때문이다. 토지를 묶어둔 기업들의 부가가치는 부동산 투기로 분석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도 R대기업은 펜스만 치고 세월 가거라 보내는 몰염치는 타워크레인만 서있고 건축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송도가 투기장 소라고 꼽지 않다.

송도에서 땅장사나 하는 모습은 대기업 배 째라는 식으로 보인다. 부동산에 대해 폐단은 지방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변해 일관성이 없다.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 잘못인지 알아야 한다. 이는 위정자들의 잘못이다. 계약 조건에 공사가 늦어지면 여기에 따른 벌칙이 약하기 때문이다. 실제 무상 땅을 받은 대기업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불어났다.

인천에서 얼마나 유익을 끼쳤는지 생각할 때다. 지방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허접스러운 행정은 눈앞에 성과의 탐욕으로 기업만 배를 불리고 있고 시민 체감도가 없는 개발은 함흥차사다.

한편, 인천시민들은 개발이 다소 늦더라도 향후 정책은 더 촘촘하게 살펴야 할 시점이 인천의 과제라고 한다. 그래서 특혜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